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9.14~9.20)

1 경제일반

1. 스가 新내각 주요 경제 정책 관련 언론 전망 등

1. 스가 총리 주요 경제 정책 : 아베노믹스 계승과 규제개혁에 의욕

가. 위기 대응 주력한 적극적 재정 조치

- 아베 정권은 1,2차 추경예산에 총 57조엔 이상을 계승해 대규모 재정지출 노선을 유지해온 바, 스가 총리도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고용을 지키고 사업 계승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 토록 아소 재무대신에 지시하는 등 이미 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위기 대응’ 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닛케이).

※ 아사히는 당분간은 남아있는 8조엔 가량의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책을 확충할 것으로 보이나 ‘예비가 예상보다 빨리 사용되고 있다(재무성 간부)’며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독자색을 내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기술

- 구체적으로는 감염확산 장기화에 따른 수익 감소 중소기업 대상 지속화 급부금(최대 200만엔) 인상 및 소비 환기책 ‘Go To 캠페인(총액 1.7조엔)’ 관련 여행사업 숙박 보조 외 쿠폰 지급, 외식 지원 순차 개시 등 추가적 소비 진작 방안 등 상정

※ 요미우리는 코로나19 위기 기업 도산은 500건 이상으로(도쿄상공리서치) 지속화급부금 지급액은 4조엔을 넘어섰다고 추가 지원방안을 언제 어떤 규모로 제시할지 주목된다고 기술

- 10월부터 연말에 걸쳐 본격화 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재무성이 9.30 각 성청 개산요구 접수 마감)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비 증가의 억제, 대규모 자연재해 등 방재·감재 대책, 도쿄 일극집중 시정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요미우리)

나. 디지털청 출범 추진

-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책 일환인 전국민 10만엔 일괄지급 결정 이후,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한 신청에서 미비점이 속출함에 따라 중앙 성청의 디지털화가 지체되고 있음을 통감한 바, 정부 내에는 내각관방의 IT종합 전략실과 총무성, 경산성 내 관련부국 통합을 통합한 ‘디지털청’ 을 내각부 外局에 설치해 디지털 정책을 일원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요미우리, 닛케이 등).

- 관련하여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IT 담당대신은 취임 회견에서 보급률이 약 20%에 그쳐있는 마이넘버카드가 ‘행정 디지털화의 열쇠’ 라며 보험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同 카드의 편의성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해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아사히)

※ 산케이는 정권의 주력 정책인 ‘디지털청’ 창설을 맡게 된 히라이 대신에 대해 黨內 유일의 IT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로, 신흥기업의 경영자와도 인맥이 넓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청’의 필요성 제기를 계기로 총리의 눈에 띄었다고 기술

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 스가 총리는 9.16 취임 기자회견에서 ‘장기간에 걸쳐 90%의 독점 상태를 유지하며 세계적으로도 비싼 요금을 받아 계속해서 20%의 영업이익(율)을 올리고 있다’ 며 휴대전화 업계를 지목해 비판함(요미우리).

※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3대 통신사는 국내 계약자의 약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독점, 각사 영업이익율은 모두 19% 내외 수준에 달하며, 도쿄 휴대전화 요금은 런던의 3배, 서울의 1.3배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총무성)

- 2019년 가구 당 휴대전화 요금 지출액은 약 10.3만엔으로 소비지출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바, 경제재생을 위한 소비 활성화를 중시하는 스가 내각은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인하할 경우(약 40% 인하 상정), 개인소비가 늘어나 국내수요가 주도하는 형태로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선순환에 기대

- 관련하여 다케다 총무대신은 9.16 회견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비하고 이용자가 납득할 만한 저렴한 요금 서비스를 실현시킬 것’ 이라고 언급

라. 지방은행 재편 등 금융 개혁

-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 입후보 표명 계기 기자회견에서 지방의 인

구감소 및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지방은행과 관련, ‘재편도 하나의 선택지’ 라고 발언하고 지방경제의 성장력 향상에는 자금공급처인 지방은행의 경영 강화가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금융분야에서는 지방은행의 재편도 하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닛케이).

※ 상장 지방은행 78行·그룹의 연결순이익은 2020.3월까지 4년 연속 감소한 반면, 30년 간 지방은행 수는 약 20% 감소에 그친 상황(132行 → 102行)

※ 요미우리는 아소 대신이 9.16 회견에서 스가 총리로부터 지방은행 재편을 비롯한 환경정비 추진 지시가 있었음을 표명했다며 지방은행 간 통합 및 합병 움직임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

- 한편, 금융청은 올 가을부터 금융심의회에서 은행의 출자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해 코로나사태로 고심하는 은행의 사업 재생·계속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출자를 용이토록 하는 제도마련을 서두를 계획
- 또한, 세계의 금융허브로서 일본 시장의 입지를 향상시키는 금융도시 구상도 주목되고 있어 해외 자산 운용회사 및 금융인재 유치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불가결

마. 기타

○ **(재정 전전화)** 스가 총리는 아소 대신에 ‘경제·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며 지속적 세출입 개혁을 통한 경제재생과 재정재건의 양립을 도모토록 지시함(닛케이).

- 올 봄 이후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함과 동시에 세수도 당초 예상(63.5조엔)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소 재무대신은 9.16 회견에서 당분간은 경제대책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면서 ‘세입·세출 양면의 개혁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 이라고 단언(요미우리)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1.2차 추경예산이 160.3조엔으로 팽창하며 당초 예산 대비 약 60% 증가

○ **(지방활성화)** 감염확대의 타격을 입은 농업분야와 관련해 ‘수익을 내는 농업’ 을 위한 시책을 가속화하는 한편, 스가 총리 본인이 주창해온 2030년 방일 외국인 6천만명 유치 목표도 유지할 전망이다(요미우리).

* 생산·유통 자유화를 통한 2030년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 5조엔으로의 확대 목표 설정

○ **(경제외교)** 스가 내각은 최초의 경제외교로서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이 경과해 2020.11월 서명을 목표로 추진중인 RCEP 협상 가속화에 나설 것으로 보임(요미우리).

- 하이테크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 관련, 미국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아시아 공급망 정비 분야에서 협조하는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며, 아울러 디지털 국제 규범 마련을 주도해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

○ **(에너지 정책)** 2022년 여름 탱크 저장량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로부터 처분방법 조기 결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취급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재가동 병행 등을 통한 脫탄소화사회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스가 내각 주요 경제 과제 (요미우리)]

경제외교	· 2020년 중 RCEP 서명 · 미중 하이테크 대립 대응 · 對한국 수출관리 엄격화
중소기업	· 코로나19에 관련 경영 지원방안 · 경영자 고령화, 사업계승·신진대사
에너지	· 석탄화력 휴폐지, 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재가동 ·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처분 방법 결정 · 핵폐기물 최종처분장 논의
관광	· 국내여행 회복 · 방일객 2030년 목표(6천만) 추진
농업	· 농업인력 부족 해소 · 농업 IT화 · 농산물 수출확대
통신	· 휴대전화 요금 인하 · 5G 보급

2. 언론 평가

가. 주요 보도 동향

○ (‘스가노믹스’ 실현 장기전 전망)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 등 산업정책을 주축으로 삼은 스가 정권의 경제정책은 행정 및 대기업의 기득권의 타파해 경쟁원리 기능을 촉진시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음(산케이).

- ‘아베노믹스’ 계승 입장을 표명한 스가 총리이나, 즉효성이 있는 금융

정책을 주축으로 엔고(円高) 시정 및 주가상승을 노린 前정권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며, 내정이 주체가 되는 화려함은 없으나 정권 목표가 구조개혁인 만큼 저항세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대립축이 명확하다는 점은 여론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것

※ 미우라 유타카(미즈호 증권) : '아베노믹스 계승 관련' 대부분이 제임 및 부처 이동, 경험자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 계승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일본은행의 연계도 지속될 것'(마이니치)

- 스가 정권은 총리 임기가 2021.9월로 종료되는 단기 정권으로 고작 1년 안에 국민의 희생이 동반되는 구조개혁은 곤란한 바, 구조개혁을 정권 목표로 삼은 것 자체가 장기정권에 대한 의욕의 반증

- 단, 정권 기반 구축에는 2021년 봄까지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코로나19 재확산 등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무사히 월동(越冬)한다면, 장기 전권으로의 교두보를 구축하게 될 것(미즈호은행 관계자)' 이라는 견해도 존재

○ **(조급한 경제활동 재개)** 관방장관 시절부터 'Go To 트래블' 조기 시행 및 긴급상태선언 조기 해제 등 경제를 우선시하는 자세를 선명히 해 온 스가 총리는 향후도 경제활동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아사히).

- 단, 코로나19 감염확산과 관련해 인플루엔자와의 동시유행 우려 속에 후생성의 의료붕괴 방지를 위한 의료체제 확충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바, '겨울철 진정한 '감염 파도' 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 지금부터가 실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의) 액셀과 브레이크의 균형을 확실히 맞춰야 한다(국립병원기구 샌다이 의료센터 관계자)' 는 지적도 존재

○ **(지방은행, 통합·합병에 신중)** 닛케이신문이 2019.7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03곳의 지방은행 중 70% 이상인 76곳이 향후 재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응답하는 등 대대수의 지방은행이 통합·합병에 신중 자세를 보임(닛케이).

※ 주코쿠은행 :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추진은 적당하지 않다'

- 단, 2020.11월 독점금지법 특례법 시행으로 동일 현(縣) 소재 지방은행 간 합병이 용이해져 지방은행의 선택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독

자 생존을 모색하더라도 디지털화 대응 등 개혁은 불가피한 바, 지방은행 경영진에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

○ **(재정건전화 요원)** 정부는 2025년도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화라는 재정건전화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2020.7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骨太)방침)' 에는 동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바, 재정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동안 대담한 규제철폐 등 향후 성장을 이끌 정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성장을 통한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닛케이)

※ 기우치 다카히메(노무라종합연구소) : '코로나대책으로 재정 확장 노선이 강해진 점이 우려됨'(마이니치)

○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책적 여지 한정)** 스가 정권의 주력 정책 중 하나인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국민 생활에 직결하는 만큼 주목도가 높으나, 관련 법개정*이 실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적 정책 여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아사히).

* 2019.5월 통신사 경쟁 촉진을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통과, 10월 新규범을 도입하여 약정(2년) 해제 시의 위약금을 기존 9,500엔에서 1천엔으로 인하, 단말기와 통신요금 간 비교 용이화

- 관련하여 총무성 간부는 '경영자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이라며 통신사의 자발적 인하에 기대 표명

○ **(국민 이해 동반한 디지털화 추진 관건)** 정부가 다양한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데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아 국민이해를 얻으면서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는 新조직 및 관련 제도의 설계가 관건이 될 것임(아사히).

나. 경제계 반응

○ 스가 新내각 출범 관련, 경제계로부터는 규제완화 및 디지털화 추진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와 주문이 이어진 바, 주요 인사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아사히, 마이니치).

- **(나카니시 경단련 회장)** 9.16 담화를 통해 '개혁 의욕이 넘치는 인재가 다수 배치되었으며,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 개혁의 강력한 수행이 기대되는 포진' 이라 평가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불가결한 디지털화 추진에는 '수직적 행정 및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것' 이라며 개혁 단행

에 강력한 리더십을 촉구

- (미무라 상공회의소 회두) 9.16 회견에서 ‘아베 정권의 노선을 이어가며 디지털화 등 개혁을 추진한다는 균형 잡힌 진용(陣容)’ 이라 평가하고 코로나사태가 장기화 하는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속적 지원을 요청
- (사쿠라다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실행해야하는 정책 과제와 우선순위를 제시해 국민에 성실히 설명해 ‘업무’ 에 임해주길 바란다 ‘고 언급
- (무라타 일본백화점협회장) ‘경제 정책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개인소비의 회복과 새로운 수요 환기로,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 하다며 침체된 개인소비 회복을 주문
- (도요타 일본자동차공업회장) ‘자동차 산업이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 지원을 요청한다’ 며 자동차 관련 세부담 경감 등 요망

2. 일본은행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금융완화 유지)

- (新정권과 연대 방침) 금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유지가 결정돼,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9.16 발족한 스가 정권과 ‘확실히 연대하여 정책을 운영할 것’ 이라는 자세를 보임.
 - 구로다 총재는 아베정권하에 임명된 바, 시장 일각에서는 아베 前총리의 퇴임에 맞춰 중도 퇴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임기를 완수’ 할 것임을 표명
 - 구로다 총재는 정기적으로 총리관저를 방문해 아베 前총리와 의견을 교환해왔으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발언
 - 일본은행은 코로나19대책으로 자금조달지원 및 시장안정을 기동으로 금

융완화책을 추진해왔으며, 자금조달지원은 정부의 경제대책과도 연동

- (2% 물가목표 유지 방침) 일본은행이 ‘13년 日 정부와의 공동성명에서 2% 물가상승률 달성목표를 내건 이래 실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물가하방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부상함.
 - 구로다 총재는 ‘2% 목표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고 강조하며 물가목표를 유지할 방침
 - 2% 목표 유지의 배경에는 물가목표를 하향수정할 경우 시장이 금융완화 자세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해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 존재
- (미국 및 유럽도 금융완화 장기화 방침) 美 FRB는 9.16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실상의 제로금리 정책을 적어도 23년 말까지 계속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를 넘더라도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도 강조함.
 - 제롬 파월 FRB의장은 회의 후 ‘더욱 장기간에 걸쳐 우리들의 강한 약속을 명확히 하겠다’ 고 언급해,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을 강조
 - 유럽중앙은행(ECB)은 9.10 개최된 정례이사회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보류했으나, 시장에서는 ECB가 근시일 내로 양적완화의 재확대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
 - 독일·프랑스 등 유로권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4년 3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물가 하락 우려 고조
- (日銀 금융완화 장기화 가능성) 미국 및 유럽이 금융완화 자세를 강화할 경우, 일본과의 금리차가 축소하여 엔고 압력이 강화되며, 실제 美 FRB의 제로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자 9.17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일시적으로 달러당 104.60엔대를 기록하며 약 1개월 반만의 엔고 수준을 기록함.

- 스가 총리는 아베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해오며 주가 및 환율 동향에 민감한 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시장이 급변할 때 개척되는 재무성, 금융청, 일본은행의 3자회의를 발안(發案)한 장본인
 - 시장에서 엔고 및 저주가 추세가 계속되면 스가 총리가 일본은행에 대해 금융완화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 지적
- 고용환경 역시 서서히 악화함에 따라, 스가 총리는 추가 경제대책을 위해 제3차 보정예산안 편성도 시야에 넣고 있어, 그럴 경우 일본은행도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확충 등으로 연대할 가능성 농후
- 한편,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아베노믹스 하에서의 지나친 금융완화로 정책 자유도가 줄어든 상황임. 코로나 대응이 일단락되면 정책정상화를 위한 포석을 깔 것’ 이라는 전망 제시

□ (장기에 걸친 금융완화 부작용 우려) 마이너스금리 정책 등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이 대출금리의 저하 등을 통해 지역금융기관의 수익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스가 총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지방은행은) 수가 너무 많다’ 고 발언하는 등 재편을 촉구할 자세이며, 구로다 총리 역시 이에 대해 ‘선택지 중 하나’ 라며 호응함.

- 현재 닷케이지수는 2만 3,000엔 대의 추이를 보이며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나,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9.17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급락에 대한 경계감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간부)는 인식을 보이며 ETF의 매입 상한을 유지하는 방침 결정
- 이에 대해 ‘시장의 주가 결정 기능을 일본은행이 방해하고 있다’ (닛세이 기초연구소 이데 신고 치프 주식 스트래티지스트)는 등 금융완화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견해도 다수 존재

□ (전국 4개 ‘촉진구역’ 사업자 선정) 日 정부가 10월부터 해상풍력발전의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인 가운데, 각 기업들의 업종을 뛰어넘은 사업 참가 표명이 잇따르고 있음.

- 日 정부는 작년 12월 나가사키현 고토시 앞바다, 올해 7월 아키타현 앞바다의 2개 구역 및 지바현 앞바다의 총 4개 지역을 해상풍력발전 ‘촉진구역’ 으로 지정
- 동 촉진구역에 대해, 대형 전력회사,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등 포함 약 10개 이상의 기업연합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전망
- 아키타현 앞바다 2개 구역에 대해 사업계획을 제출 예정인 도호쿠전력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능력을 대형 원전 2기에 상당하는 200만 킬로와트(kW)로 높일 방침으로, 지역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지역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노력하고 싶다’ (간부)는 의욕 표명

<해상풍력발전 촉진구역 및 사업참가 예정인 주요 기업연합>

아키타현 노시로사미타네초오가시 앞바다	- 스미토모상사, JR동일본에너지개발, 도쿄전력 리뉴어블 파워(발전규모 48kW) - 오바야시구미, 간사이전력, 도호쿠전력 등(45kW) - 주부전력, 미쓰비시상사파워(48kW) - 일본풍력개발
아키타현 유리혼조시 앞바다	- 레노바, 코스모에코파워, 도호쿠전력, JR동일본에너지개발(70kW) - RWE(독일계), 규슈전력미래에너지(70kW) - 주부전력, 미쓰비시상사파워 등(84kW)
나가사키현 고토시 앞바다	- 도다건설(2.1kW)
지바현 조시시 앞바다	- 도쿄전력리뉴어블파워, 오스테드(덴마크계)(37kW) - 주부전력, 미쓰비시상사파워(35kW) - 오릭스

- (日 정부 해상풍력발전 보급 지원) 日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4월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 (이하 이용법)을 시행을 통해 해역의 이용에 대해 사업자 및 어업관계자들이 협의하는 장 및 규칙을 마련함.
 - 이용법 시행과 관련, ‘장기적인 계획 책정 및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사업화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대형전력회사 관계자)는 평가 존재

3. 日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선정 본격화

- 해상풍력으로 발전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제도인 ‘고정가격매수제도(FIT)*’의 대상이 되며, 정부는 내년 여름까지 ①매수가격, ②사업실현성, ③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심사하여 각 해역별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연합을 1개 선정, 2020년대 후반에는 발전 개시 전망

*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日 정부가 정한 일반 전력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형전력회사가 매수하는 제도. 同 제도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국민이 전기요금 통해 부담

- 가자야마 日 경제산업상은 7월 중순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형 경제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며, 해상풍력발전을 그 견인역으로 삼아 ‘당초 10년간은 매년 100만kW를 도입하며, 40년에 걸쳐 3000만 kW를 상회하는 전력 생산이 목표’한다고 발언

□ (재생에너지 보급책 실적 저조가 배경) 日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지원의 배경에는 재생에너지보급책이 생각만큼의 진전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 현행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30년도 발전량 전체의 점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2~24%’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18년도 기준 17%까지 비중을 확대했으나, 절반은 태양광 및 수력발전으로 풍력은 0.7%에 그치며 육상설비가 대부분인 상황임.

- 기후에 좌우되는 태양광 및 육상풍력발전은 발전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으며, ‘태양광발전부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아, 일본의 산업이 육성되지 않음’ (경제산업성 간부)을 지적하는 반성의 목소리도 존재

□ (부품조달비용 등 과제 산적) 해상풍력발전소에 필요한 부품 수는 1만~2만개로 자동차에 필적하는 관련 기업의 사업범위 확대가 기대되나, 유력기업을 다수 보유한 유럽과는 달리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기업의 수는 한정됨

- 현재 日 국내 풍력발전 풍차의 70%는 해외에서 만들어졌으며, 히타치 제작소는 풍력발전설비의 자사생산을 중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지금대로라면 향후 해외제 부품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

- 해상풍력발전의 발전 비용 삭감도 과제로, ‘12년 민주당 정권이 도입한 FIT제도에서 당초 1킬로와트시(kWh) 당 40엔이라는 높은 매수가격

을 결정한 이래 서서히 가격을 인하하여 10엔대까지 내려왔으나 전기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

※표준적인 전력사용량의 가정은 재생에너지 보급비용으로 매월 767엔을 부담

- 발전비용 삭감을 위해서는 설비의 건설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거점이 되는 항구의 정비도 불가결해, 日 정부는 제도 개정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인프라의 정비에도 주력하는 것이 필요
-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 야마지 겐지 부이사장은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기술은 일본이 강점을 가진 조선업과도 관련이 큼.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연대해 본격적으로 임한다면 일본기업이 주도하여 (해상풍력발전)을 보급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임’이라는 견해 제시

4. 스각 내각, 경산성·환경성 脫탄소 주도권 경쟁 지속 전망

□ (경제산업성·환경성 유임) 아베 내각에 이어 新스가 내각에서도 가자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 및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성이 유임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일본의 脫탄소화 대응을 둘러싼 두 사람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 가자야마 경제산업성은 착실한 업무로 스가 요시히데 수상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고이즈미 환경성은 강한 발언력을 평가
- 가자야마 경제산업성은 9.16 오전 임시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脫탄소화 심화를 위한 틀이 정리되고 있음. 조속히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
- 한편, 脫탄소화 대응 관련 높은 관심을 보여 온 고이즈미 환경성은 9.15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래 (스스로가) “사회변혁담당장”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발언

- 경제산업성 간부는 ‘고이즈미 환경성의 지적에는 귀담아 들어야 할 점도 있으나, 에너지 정책은 어디까지든 경제산업성의 책임’이라는 견해 제시

□ **(석탄화력발전 휴폐지 난항)** 일본 脫탄소화 정책의 기동 중 하나는 발전 효율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휴지 및 폐지로, 日 국내 산업계도 배려하면서 온난화가스의 배출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체제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진두지휘에 난항이 예상된다.

- 일본 脫탄소화 정책은 온난화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효율형 시설은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유럽의 ‘전폐’ 노선과는 일선을 긋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불가결
- 日 국내에서도 전력회사는 물론이고, 석탄화력을 자가발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철강, 화학업계 등으로부터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며 신중론 속출하고 있는 상황

□ **(석탄화력발전 수출지원 조건 엄격화 성과)** 한편, 脫탄소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을 모으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수출지원조건 엄격화는 고이즈미 환경상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으며, 금년 새롭게 책정된 인프라수출전략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과 관련 채무보증 등 ‘공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명기함.

- 이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 대해 고성능 석탄화력발전이 한정해 수출지원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고이즈미 환경상과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면을 동시에 세워준 성과

□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과제)** 그 외 에너지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문제로,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부흥 및 폐로 오염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라며 호소하고 있으나, 日 정부가 검토 중인 해양 방류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뿌리 깊음.

- 처리수 저장 탱크는 2022년 여름 경에는 가득 찰 것으로 보여, 해양방류를 결정해도 준비에 2년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결단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日 재무성 2020.8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 9.16 재무성이 발표한 2020.8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2,483억 엔으로 흑자 기록(2개월 연속 흑자)
 -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부진이 계속되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8%로 6개월 연속 2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대중 수출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 감소폭은 축소
 - 5월을 저점으로 수출 감소폭은 3개월 연속 축소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며 여전히 낮은 수준
 - *수출 감소세: (3월) ▲11.7% → (4월) ▲21.9% → (5월) ▲28.3% → (6월) ▲26.2% → (7월) ▲19.2% → (8월) ▲14.8%
 - 수입 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등 자원을 중심으로 침체가 계속되며 전년 대비 ▲20.8%로 2자릿수 감소율 기록
 - 재무성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저점을 지났는가를 무역통계 수치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고 설명

[2020.8월 무역수지]

수출	금 액	5조 2,327억 엔	▲14.8%	21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83.6	▲14.9%	13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4조 9,844억 엔	▲20.8%	16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90.2	▲11.6%	4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금 액	2,483억 엔	-	2개월 연속 흑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 수출은 원동기(▲34.8%) 및 의약품(▲69.4%)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원유 및 조유(▲68.3%), 항공기류(▲34.6%)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731억 엔의 흑자(6개월 연속 감소)
- 코로나19 영향으로 봄부터 수출이 급감했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4% 감소에 그쳤으나, 대미수출 전체 감소폭은 ▲21.3%로 전월(▲19.5%) 대비 확대

[對미국]

수출	9,369억 엔	▲21.3%	13개월 연속 감소
수입	5,637억 엔	▲22.0%	4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3,731억 엔	▲20.3%	6개월 연속 감소

(중국)

-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35.6%) 및 비철금속(+81.4%)이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34.5%)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32.3%), 통신기(+26.8%) 등이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7.1%), 전산기류 부분품(▲30.9%)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576억 엔의 적자(6개월 연속 적자)
- 중국내 생산활동의 조기 재개에 따라, 대중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
- 중국 공업 생산의 성장을 견인하는 스마트폰 관련 수요를 반영하며 반도체 등 제조장치가 전년 동월 대비 35.6% 증가,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 확대

[對중국]

수출	1조 2,616억 엔	+ 5.1%	2개월 연속 증가
수입	1조 3,192억 엔	▲ 7.0%	2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 576억 엔	▲73.7%	6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 수출은 비철금속(+33.8%)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20.6%)가 증가한 반면 철강(▲27.5%) 및 광물성연료(▲52.7%)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4.5%) 및 통신기(+24.6%)가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2.6%) 및 액화천연가스(▲44.6%)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011억 엔의 흑자(4개월 연속 흑자)
- 對韓 수출 및 수입 6개월 연속 감소
 -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4월) ▲10.6% → (5월) ▲18.0% → (6월) ▲15.1% → (7월) ▲14.1% → (8월) ▲13.8%
-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출은 전년 대비 55.7% 증가, 6월(+51.0%), 7월(+64.3%)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 기록

[對아시아]

수출	3조 788억 엔	▲ 7.8%	6개월 연속 감소
수입	2조 5,776억 엔	▲11.2%	4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5,011억 엔	+14.9%	4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20.8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 수출은 자동차(▲29.8%), 원동기(▲50.3%)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자동차(▲44.7%) 및 항공기류(▲86.6%)가 감소해 무역수지는 ▲811억 엔의 적자(14개월 연속 적자)

[對EU]

수출	4,763억 엔	▲19.2%	13개월 연속 감소
수입	5,573억 엔	▲22.1%	8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811억 엔	▲35.6%	14개월 연속 적자

[일본의 2020.8월 對韓 수출입 통계]

□ (수출) 2020.8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3,64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 감소

- (감소 품목) 원료품(-36.7%), 광물성연료(-44.0%), 화학제품(-22.7%), 원료별 제품(-21.8%), 전기기기(-13.5%), 수송용기기(-4.03%), 기타(-12.3%)
 - 화학제품은 플라스틱(-22.6%), 의약품(-13.6%)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25.9%), 금속제품(-33.4%)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9.8%), 전기계측기기(-9.7%)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45.8%), 자동차 부품품(-36.6%)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29.3%), 사진·영화용 재료(-22.1%) 등 포함
- (증가 품목) 식료품(9.8%), 일반기계(18.7%)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55.7%), 펌프·원심분리기(135.7%) 등 포함

□ (수입) 2020.8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1,964억 엔으로 18.3% 감소

- (감소 품목) 식료품(-14.3%), 원료품(-26.1%), 광물성연료(-29.8%), 화학제품(-21.8%), 원료별 제품(-8.3%), 일반기계(-29.2%), 전기기기(-15.3%), 수송용기기(-48.9%)
 - 식료품은 어패류(-5.0%) 등 포함
 - 원료품은 목재(-56.7%), 비철금속광(-30.1%) 등 포함
 -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30.2%)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20.8%)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29.9%), 금속제품(-18.7%)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원동기(-19.6%), 전산기류 및 부품품(-23.4%)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22.7%),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33.6%) 등 포함
 - 수송용 기기는 자동차 부품품(-51.3%), 항공기류(-45.6%) 등 포함
- (증가 품목) 기타(1.6%)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11.9%) 등 포함

3 대외경제 동향

6. 美 정부 화웨이 전면 제재 실행(9.15) 관련

□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 직격타 (닛케이, 도쿄신문)

- 美 정부의 9.15 화웨이 제재 시행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제조장치, 재료 등 반도체 개발과 제조에 미국의 기술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바, 화웨이의 반도체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美 정부는 2019년 수출관리법에 의거, 화웨이를 수출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산 반도체 수출을 금지, 2020.5월 화웨이가 설계에 관여해 외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한 제품일지라도 美 기업의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수출을 금지, 同年 8월 메모리 반도체 등 범용품으로 수출 제한 대상 확대

- 동 제재는 화웨이의 고기능 스마트폰 사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 재고 감소로 同社의 2021년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2020년 전망을 70% 밀돌 것이라는 예측도 등장

- 화웨이는 고기능 제품용 반도체인 ‘치린(kirin)’ 을 독자 설계해 臺 TSMC에 생산을 위탁해왔으나, 2020.5월 美 정부의 규제강화 표명 이후 신규 발주가 불가능한 상황

- 臺 현지 매체인 디지타임즈는 9.7 화웨이가 이르면 올 가을 출시할 플래그십 스마트폰 ‘Mate40’ 의 생산량을 당초 계획 대비 30% 줄일 것을 공급자에 요청했다고 보도, 臺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同社의 스마트폰 출하대수가 2019년 2억 4천만대에서(세계 시장점유율 2위) 美 제재 이후 2020년 1억 9천만대, 2021년 3천만~5천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

- 한편, 반도체 부족은 스마트폰 외에 화웨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통신 기지국 생산에도 중장기적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G 서비스 제공 지체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화웨이 관계자 : ‘스마트폰에 비하면 (기지국) 반도체 재고를 확보했으므로 당장 생산에 영향은 없을 것’

□ 경쟁사에 好期 (닛케이)

- 美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20년은 애플이 화웨이를 제치고 2위로 부상할 것’ 으로 예측하는 등 화웨이 제재는 올 가을 5G iphone 출시를 앞둔 애플에 큰 순풍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中 OPPO 및 VIVO 등도 화웨이가 잃게 될 시장점유율을 흡수해 사

업 확대로 이어나갈 전망

□ 각국 기업 대응 착수 등 (닛케이, 도쿄신문)

- 9.15 新제재 발효 이후 화웨이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美 상무부로부터 규제 적용 제외를 인정받아야 하나, ‘허가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출하가 정지될 것(韓 반도체 업계)’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SK하이닉스) 화웨이와의 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의 11%를 차지하는 3조엔으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9.14까지 美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을 완료
- (삼성전자) 화웨이에 반도체 메모리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연간 거래액은 전체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7조 3,000억원(韓 유진투자증권 추산)에 달하나, 화웨이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경쟁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해 범용품 반도체 메모리는 타사에 돌아갈 가능성
- (소니) 화웨이와 수천억 규모의 ‘이미지센서’ 공급 거래를 맺어왔으며, 거래 지속을 위해 美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출하 중지), 전문가는 ‘美 정부에 달려있겠지만 화웨이로의 수출은 어려울 것’ 이라 지적
- (JDI) 스마트폰 액정패널을 생산하는 JDI는 中 샤오미 및 OPPO 등 여타 기업으로의 판매 확대 모색 중
- 한편, 하이테크 분야를 둘러싼 美中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번 제재 실행으로 화웨이에 연간 1.1조엔의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다대할 것으로 예상됨.

7. 美 화웨이 규제에 따른 업계 영향

1. 日 업체 영향

- (日 업체 영향 확대) 美 상무부의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 규제가 9.15를 기해 발효, 日 국내 기업들은 2019년 기준 화웨이에 약 1조 1,000억 엔

의 부품을 공급해 온 만큼* 일본 업체들에게도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 영국 리서치회사 Omdia社 조사

[참고] 日 기업 화웨이 규제 대응

	기업명	제품	대응·영향 등
스마트폰용	소니	이미지 센서	수출 허가신청 검토
	키옥시아	플래시메모리	잉여 생산능력을 他社에 할당
기지국·인프라용	미쓰비시전기	광반도체 등	화웨이 생산감속 우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전파증폭기	他제조사에 판매 확대
	도시바	HDD 등	명확한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출하) 중단

- (對화웨이 공급 중지) 반도체 메모리 대기업 키옥시아(舊 도시바 메모리)는 9.15, 對화웨이 플래시 메모리 출하를 중단하고 잉여 생산능력은 他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데이터센터 제품에 할당할 예정임.
- 소니도 對화웨이 이미지센서 공급을 중단했으며, 통신기기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미쓰비시전기도 對화웨이 일부 제품의 출하를 중단
- 반도체 대기업 르네사스 테크놀로지社도 9.15, 차세대 통신규격 5G 기지국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
- 미국의 對화웨이 조치는 당초 ‘미국산 부품이 25% 이상 사용된 경우’ 를 규제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제품 개발 등에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경우’ 로 대상이 엄격화됨에 따라 소니·키옥시아 등 일본 업체는 ‘예상치 못한 손실’ 이라는 입장
- (공급처 분산 및 투자 하향조정) 소니는 2020.8월 초, 2021년 3분기까지의 3년간의 설비 투자를 당초 계획했던 7,000억 엔에서 6,500억 엔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기존 이미지 센서의 용도를 자동차 및 산업기기용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 고객 확대 및 제품의 他 용도 개발에 힘쓸 예정임.
- * 소니 경영진은 화웨이 문체 장기화를 우려, ‘2021년 이후 투자계획도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
- 미국의 동 조치로 인해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이 어려워지면 美 애플 또는 他 중국기업이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니 간부는 ‘(화웨이 이외의) 공급처 분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공급경로 세밀 조사)** 동 규제를 통해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對 화웨이 반도체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제3자 회사를 통해 화웨이 에 공급되는 경우도 美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업체들은 부품 공급경로를 세밀히 조사할 필요를 인식하고 행동에 나섬.
- EAR 위반시 EAR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방대한 양의 미국산 소프트웨어 및 첨단기술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며, 수입이 제한되면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에 장애가 발생함과 동시에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금고형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 日 도시바는 9.15부터 하드디스크 구동장치(HDD)와 반도체 출하를 일시 중단하고, 자사 제품의 (美 상무부의) 규제대상 해당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언급
- **(日 이동통신 영향은 한정적)** 일본의 4대 이동통신사 중 5G 기지국에서 화웨이 제품을 도입한 회사는 없어*, 동 규제가 일본의 이동통신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임.
* 4G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일부 도입
- **(日 기지국 제조업체에는 순풍)** 동 조치로 향후에는 화웨이의 통신기지국 사업에도 중장기적으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NEC 및 후지쓰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일본 기지국 제조업체에는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

2. 세계 동향

- **(세계 각 기업도 규제강화)** 日 기업 이외에도 스웨덴 에릭슨·노키아 등도 他 기지국 업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영업 활동을 강화했으며, 대만 TSMC도 화웨이 신규수주를 2020.5월에 중단함.
- **(화웨이·中 정부입장)**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9.11 미국의 對 中압력 관련, ‘중국기업을 보호할 권리를 유보한다’ 며 대항조치도 불사할 자세를 보임.

- 화웨이 일본법인 회장은 2020.8월 온라인 이벤트에서 ‘2019년 일본 기업發 부품조달금액은 1조 1천억엔에 달한다고 밝히며 일본이 화웨이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
- 화웨이 일본법인은 美 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 내 거래처의 불안 해소에 혈안이 되어 있으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 허가는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 이라는 견해가 유력

3. 전문가 평가

- **(과급력 우려)** 나카야마 아쓰시(中山淳史) 닛케이신문 코멘테이터는 부품 조달이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회로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美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과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함.
- **(D램 가격동향)** 화웨이는 美 규제 실시 전에 부품 재고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 스마트폰 필수 부품인 반도체 메모리 D램의 스팟 가격은 2020.9월 초 기준 7% 급상승했으나 화웨이의 2021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전망 대비 70%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함.
- Omdia社 미나미카와 아키라 수석디렉터는 ‘D램 가격도 화웨이의 확보 움직임이 없어지면 9월 중순 이후 가격이 내려갈 것’ 이라고 분석, 향후에도 日 국내 반도체 업계 내 화웨이 동향 주시할 필요

8. 英, 일본의 ‘Five Eyes’ 참여에 긍정적

- **(英 총리 긍정적 자세 시사)** 英 보리스 존슨 총리는 9.16 영국 의회에서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 정보 공유 체계 ‘Five Eyes’ 의 일본 참여에 대해 ‘영국에게 있어서는 뜻을 함께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하나로 묶는 큰 기회가 될 것’ 이라며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냄.
- 존슨 총리는 ‘일본과는 좋은 관계이며, 방위와 안보면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며 일본의 참여는 ‘(현재의 日英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생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고 언급

- 존슨 총리는 일본의 참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라고 언급하면서도 '다른 Five Eyes 참여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고 하는 등, 미국 등 他참여국과 협의하겠다는 생각을 시사
- (日 정부입장) 日 모테기 외무대신은 9.18 기자회견에서 존슨 총리의 언급에 대해 '존슨 총리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 본인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나, Five Eyes는 Five Eyes로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대응에 대해 일본으로서도 평가하고 있다' 고 언급함.
- 그러나 모테기 대신은 '정의 자체가 Five Eyes이기 때문에 일본이 Five Eyes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日本がファイブアイズになるわけはないんです)' 며 '단, 일본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고 언급
- (경위) 英 보수당의 투겐하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7.21일 고노 다로 前 방위대신(現 행정개혁담당대신)과의 전화 회답에서 '일본을 포함시켜 Six Eyes를 만들고 싶다' 고 언급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고노 대신은 동 제안에 긍정적이었다고 함.
- 토니 블레어 영국 前 총리도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계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야 하며, 일본의 Five Eyes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음.

4 기타

9. 히타치, 영국 원전 건설계획 철회 표명

- (철회 표명 방향으로 9.16 최종 결정) 히타치제작소는 이미 동결 방침을 표명한 바 있는 영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철회를 표

명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9.16 개최될 간부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 동 계획은 영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되어 온 바, 일각에서는 계획재개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히타치는 금번 철회표명을 통해 리스크가 큰 원전건설계획에서 철수한다는 자세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
- 히타치는 지난 '19.1월 '민간기업으로서 경제합리성의 관점에서 판단' (히타치하라 도시아키 사장) 했다고 하며 계획의 동결을 표명했으나, 英 정부 및 '인프라 수출' 을 성장전략으로 내건 아베 정권에서는 계획재개에 대한 기대 존재
- 올해 8월에는 英 파이낸셜 타임스가 히타치가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며 계획의 향방에 다시금 주목 집중
- 히타치는 동결표명 이후 사업의 매각 및 출자처를 찾고 있었으나, 사업 재개 관측이 부상함에 따라 '“동결”이라는 애매한 상황을 바꾸기로 했다' (히타치 관계자)며 철회 표명 방침으로 조정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경제 침체로 출자처 모집이 어려워진 점도 영향
- 금번 철회표명에 따른 실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타사가 동 계획의 주체를 맡았을 때 히타치는 원전 설비를 담당하는 '기기 판매' 의 선택지는 남겨둔 방침
- (계획 동결 경위) 동 계획은 영국 서부 앵글시 섬에 원전 2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당초 담당 예정이었던 독일계 전력회사 2사가 09년 'Horizon Nuclear Power' 사를 설립했으나, 이를 '첫 원전수출 안건의 기회' (히타치관계자)로 본 히타치가 '12년 同社를 약 900억 엔에 매수해 2020년대 중반 발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음.
- 히타치는 예정보다 늦어질 위험을 수반한 건설공사 및 사고가 생겼을 경우 거액의 배상책임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는 원전 운영을 위해 관련기업의 출자를 모집해 왔으나, 출자금 모집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세계적인 원전 안전기준 강화가 이루어지며 안전대책비가 늘어나, 총사업비는 최대 약 3조 엔으로 확대

- 英 정부로부터의 추가 지원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작년 1월 계획 동결 단행

□ (아베노믹스 ‘원전수출’ 정책 완패) 원전수출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이었으나, 연이은 실패로 현재 실현가능한 안건은 전무한 상황임.

- 도시바는 ‘18년 미국 원전사업이 실패하며 경영위기에 빠진 이후, 해외 원전건설은 수주하지 않는 방침으로 전환
- 미쓰비시중공업도 ‘18년 터키에서의 원전건설계획을 단념하는 방향으로 터키정부와 협의를 시작하는 등 ‘원전수출’ 은 ‘완패’ 상황
- 日 국내에서의 원전 신설 및 증설이 어려워진 가운데 활로를 찾기 위한 해외수출의 길 역시 단절되고 있는 상황

□ (日 정부 원전수출정책 유지 전망) 히타치의 사업 철회 방침 관련,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9.15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 고 했으나, 경제산업성 간부는 ‘(원전) 수출국이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어서는 되겠는가. 신흥국 등에서 수요가 있다면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 나갈 것’ 이라며 신규안건 획득에 대한 의욕을 보이는 등 新 스가정권 발족 후에도 수출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